

노동자 단결을 위해, “민주노총 먼저!”



해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모아온 세계 노동절. 2013년 노동절에도 절박한 요구가 넘친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이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할 민주노총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결선 투표 결과, 선관위는 투표인 부족으로 선거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지도부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해 11월 7일 김영훈 위원장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파 패권과 산별대표자들의 무능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정파와 산별대표자들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원탁회의’를 통한 ‘연합집행부’ 구성의 실패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이후 어떤 정파는 후보를 내는 것도, 특정 선분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기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민주노조 운영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정파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도 자신들을 선출한 민주노총 조합원보다는 정파에 휘

둘리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산별대표자들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단결 지도부를 세워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고집하다가 오히려 원탁회의가 무산되는 데 한몫을 한 것이다. 산별대표자들은 대중조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상층 지도부인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 중심으로 사고했을 뿐, 민주노총의 단결과 지도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단결을 훼손하는 분열의 논리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정파에 의한, 정파를 위한 조직으로 보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할하자는 주장도 있고, 기존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규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는 세력도 있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정파가 수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파는 궁극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대중조직의 운영 원리와 단결 기풍을 해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노조를 분할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을 버릴 때인가

19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의 구호는 ‘민주노조 총단결’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를 깨고, 세상을 바꾸

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의 구심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그리고 그 총연합조직으로 민주노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보수우익 정권 집권과 세계 경제위기라는 정세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 안에서

첫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가기구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운영원리에 따라 민주노총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혼란을 자초한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불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더 큰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어렵더라도 ‘소송결과’가 아니라 민주노조답게 내부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를 우선에 두자.

책임있는 비대위가 필요하다

둘째,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되, 주요 산별노조·연맹이 제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차기 선거 일정까지 운영될 비대위에는 주요 산별이 비대위원과 실무자를 파견하고 투쟁과 사업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비대위 수개월 동안 민주노총의 힘과 위상은 더욱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땀방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 비대위’, 그야말로 ‘비상’한 비대위여야 한다. 쌍용

차 정리하고 분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투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장기투쟁 사업장 등 산적한 과제는 새 위원장 선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조직사업의 진전, 사무총국 혁신 등 슬하게 지적되어온 과제도 말뿐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먼저

셋째,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 지역·현장과 산별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조직적 결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투쟁을 일구고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이 나서자. 정파 소속이든 아니든, 정파 이전에 민주노총을 우선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먼저!’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의 지역·현장으로부터의 토론과 전국적 결집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안에서의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파,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을 운영해온 세력이 위기를 키워왔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함께 책임지지 못한 산별노조·연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는 논의를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도하자. 정파들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흐름에 전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산별노조·연맹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민주노총을 다시 세워내자.

주간연속2교대, 노동강도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현대기아차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노조는 생산량 보전을 위해 노동강도를 양보했다. 회사는 신규공장 없이도 작년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부품사다. 완성차 합의에 따라 주간연속2교대를 준비하던 부품사들에게 이제 노동강도 상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특히 금속노조가 없고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은 주간연속2교대제로 잔업특근이 줄어 임금까지 줄어들 상황이다.

두 번째는 완성차 국내공장이다. 2012년 말부터 현대기아차는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앞질렀다. 또한 최근 추이를 보면 해외생산을 기준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 증감을 국내공장 가동률로 조정하는데, 노동강도가 올라 국내 생산 물량 변동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존에 비해 한 시간을 더 일해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한 시간을 덜 일해도 생산물량 감소는 훨씬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특근수당 부분을 빼놓고 대부분 합의를 끝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속노조는 이후 다양한 현장투쟁과 임단협을 통해 다시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또한 부품사들을 조직해 산업차원의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 싸움은 어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유성투쟁 승리하여, 복수노조를 활용한 공격에 균열을 내자

지난 3월 20일,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굴다리 고공농성을 마친지 한 달이 넘었다. 홍종인 지회장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지회장 고공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유성 사측에 불리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자, 사측은 특별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겉으로는 교섭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장탄압을 일삼았다. 한편, 유성 사측의 계획된 노조파괴 음모와 제2노조 건설에 사측의 지배개입 정황이 다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미루기 식 수사를 해왔을 뿐이다.

이에 현장에서 전면파업을 시작

로 연일 부분파업을 이어 간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장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투쟁과 동시에 천안검찰청 압박투쟁도 수위를 높이며 진행되고 있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백화점이다. 노조파괴 전문 업체와 합작한 노조파괴 공작, 사측 경영진 지휘 하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 지배개입을 통한 어용노조 설립, 어용노조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12억 원의 손해배상액, 1분 단위로 근태를 관리하는 현장통제 등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파괴의 모든 것이 유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성투쟁에서 승리하여 복수노조를 활용한 자본의 공격에 균열을 내야 한다. 힘있게 연대투쟁하자!

하이디스와 르노삼성, 외투기업의 수탈에 맞서 투쟁하자

세계적인 LCD 기술 보유 업체인 하이디스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수년간의 적자로 부채가 산적해 있는데 올 상반기 내에 갚아야 할 돈만 1,570억 원이다.

작년 총인원의 20%에 가까운 900여 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르노삼성은 2010년 25만 대가 넘었던 생산량이 2012년도 15만 대로 추락했고, 이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두 외투기업의 속사정은 상당히 비슷하다. 2008년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계 외투자본 이잉크는 하이디스가 생산하던 물량을 대만의 자회사로 빼돌리며 하이디스를 경영위기에 빠뜨리는 한편,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기술 공유계약을 체결했다. 전형

적인 맥튀 행각이다.

르노삼성은 본사와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보는 거래구조가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 본사의 부품은 르노삼성이 비싸게 사고, 르노삼성이 생산한 완성차는 본사에 할값에 넘기는 방식이다. 지난 4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본사 부품 구매만 계속 늘리고, 신차 개발은 뒷전으로 하다가 판매가 급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외투자본은 인수회사의 단물만 빼먹고 경영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제2, 제3의 쌍용자동차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상반기 몰아닥치게 될 외투자본의 수탈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보고서

쌍용차 상층의 이후 상황과 해결책

7월 07일 OAG 안도의 공격적 책임해명과 용역깡패 동원한 강제노조 설립 목적으로 사측에 대해 철저한 기획되었다 - OAG 안도의 경영진은 연소병의 '의도적으로 단합을 위한' 노조를 자라냈다. 또한 최고의...

SUV만도 적정배치 배정과 문제점

7월 07일 OAG 안도의 공격적 책임해명과 용역깡패 동원한 강제노조 설립 목적으로 사측에 대해 철저한 기획되었다 - OAG 안도의 경영진은 연소병의 '의도적으로 단합을 위한' 노조를 자라냈다. 또한 최고의...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현재에 밀착한 분석과 대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곁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사업장 분석과 노동조합 진단 및 제언, 지역·산업 조사와 조직화 전략, 국제연대 전략** 등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노조 강화를 위해 조합원 및 간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http://www.awm.or.kr> 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02-778-4001로 연락주십시오.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

노동자민중에 재앙인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자!

공공의료 파괴와 노동조합 공격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를 앞장세워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폐업의 근거로 제시한 경영위기설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홍준표 도지사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전략을 바꿨다. '강성노조' 공세로 공공병원 폐업이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폐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은 공공의료 파괴에 더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이번 사태의 또다른 본질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공부문 민영화, 제동을 걸자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에 대한 민중운동의 대응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으로 발전·전력 민영화 기조가 강제되고 있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가스 직도입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제2공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산업 육성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기초연금을 빌미로 한 국민연금 개악 시도가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관철된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공격은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는다. 가스, 철도, 전기, 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순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그때마다 해당 부문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 또한 폐업, 민영화, 민간자본 투입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 이는 투쟁 전선을 교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역시 꾸준히 시도될 것이다. 저들의 전략이 분열과 고립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단결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 결정적인 싸움 필요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홍준표 도지사는 앞에서는 대화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안을 제시하자 "전원 사표 쓰고 살려달라고 하면 고려해보겠다"는 모욕적

인 언사를 내뱉는가 하면, 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경영진의 대화가 진행되는 지금도 경영개선과 관계없이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다른 해결책은 없다. 진주의료원을 지켜내고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를 끌어내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

노동자의 노후 보장, 국민연금 강화가 해답이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좋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특성상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60세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2007년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는 근거로 연금액을 줄이는 계약을 하며 불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여전히 개인민간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노

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들이 부담한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유리하다. 설령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자기가 낸 보험료의 80%만 연금으로 받게 되는 민간연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또한 물가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에 갑자기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연금의 실제 가치가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금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긴다는 뜻은 아니지만 개인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려는 것이다. 노후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정작 노동자가 늙을 때까지 일을 시켜오고 착취해온 국가와 자본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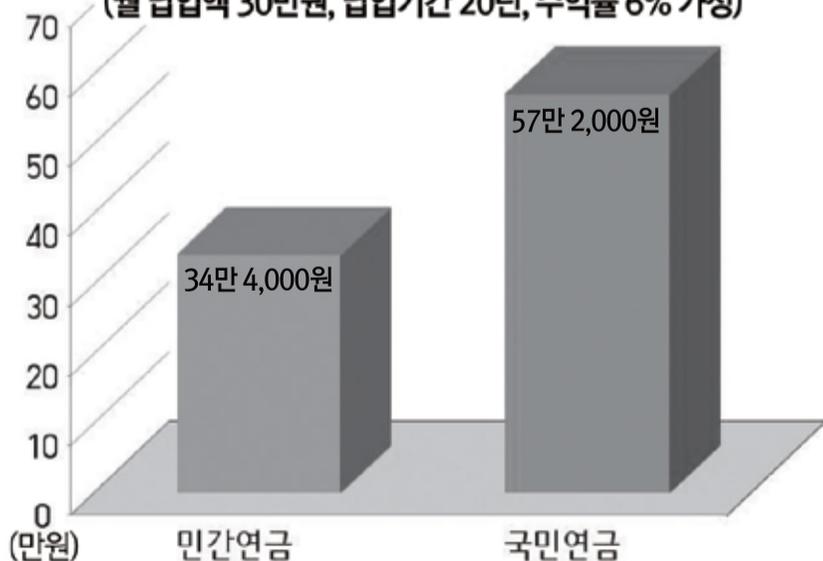
국민연금,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려 한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 연금 수급액을 더 낮추고 있고,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축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없애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지키고 더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노후보장, 개인 아닌 사회의 몫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은 지급된다. 인류가 사회를 만든 이래로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비용은 언제나 그 후세대들이 감당해왔다. 다만 그것을 개인이 부담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유럽도 연

국민연금과 민간연금 수령액 비교 (월 납입액 30만원, 납입기간 20년, 수익률 6% 가정)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문제 해결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군사안보 공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중간 평가 등 통상문제도 폭넓게 다뤄진다.

한 마디로,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이다. 또 6월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한다.

업그레이드되는 한미동맹

2009년 이명박-오바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와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 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방향은 10년 전 노무현-부시의 정상회담 당시 '한미동맹 현대

화'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예고된 바 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발효하고 평택·제주 등 미군의 아시아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데 매진했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자신의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한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잠재적 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남한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이를 '태평양으로의 선회'라고 이름 붙였다. 북한의 핵무장은 여기서 좋은 빌미가 되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전개된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와 첨단무기가 동원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핵억지력 제고만이 살 길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데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일본도 미일동맹 하에 핵무장화와 '보통국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도 추진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오히려 전쟁 유발요인

그러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위기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이미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 핵무장을 유발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 동아시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

킬 수 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발판삼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역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 군사동맹을 폐기하는 운동에 나서자. 또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심화시킬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제적 대안을 적극 제시해나가자.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사회운동 안에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한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또는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가 장기간에 걸친 북미 간 대결 구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오류와 맹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실적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미국과의 일괄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 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한에게 핵·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하여 북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딜레마로 몰아넣을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주변국의 보수적·호전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진보적 평화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도 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이라며 지지·용인하는 태도는 평화운동의 원칙에 위배된다. 2012년 새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은 당초 공언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일괄타결이나 전면전이나 양 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대결 논리는 처음부터 한반도와 주변국 민중을 불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고 그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역효과 중 하나로 남한에서는 북핵 억지력의 현실적 대안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나 남한의 독자 핵무장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장은 고사하고 대중적 토대마저 유실할 위험이 크다.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가 북미 간의 일시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일정한 타협이 도출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핵경쟁 또는 전쟁위기의 근본적 유발요인인 주둔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

의 대화나 협상이 갖는 제한적 의의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강조하건대, **북한 핵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평화를 보증한다.** 남한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새로 나온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

정가: 2,000 원